

민주 “쌍특검 반드시 관철, 이재명 구속영장은 물타기”

“특검 통해 소모적 논쟁 정리해야”

“정의당도 특검에 조속 동참 바라”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및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 관철을 주장하면서 현실화를 위한 야권 연대 합류를 정의당에 촉구했다.

15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누구도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릴 수 없다는 게 공정한 법치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가족과 검사 출신은 법 위에 군림하고 치외법권 특권을 누린다는 불멸의 신성가족, 법치의 소도가 됐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특권 정권의 선택적 법치주의와 이중잣대를 끝낼 유일한 수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이라며 “특검을 통해 수년 간 이어진 소모적 논쟁을 이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적 의혹 사안 해결은 특검에 맡기고 이제 모든 역량을 민생경제 살리기에 집중하자”며 “특검을 끝까지 거부하면 관련 의혹이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국민특검을 꼭 관철할 것”이라며 “정의당도 검찰 수사를 더 기대 말고 특검에 조속 동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고 있는 데 대해서 “대통령 부인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검찰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 개인 변호인단도 아니다”라며 “김 여사가 일반 국민이라고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겠냐”라고 했다.

동시에 이 대표 상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물타기’로 지칭하면서 쌍특검 필요성과 연계하는 방향의 주장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50억 클럽과 김 여사 부실 수사로 국민 지탄이 커지자 다급해진 모양”이라며 “급기야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얘기를 흘린다”고 했다.

또 “이 대표 영장 청구 윤은은 50억 클럽과 김 여사 의혹 바꾸기 수사로 여론이 들끓자 대놓고 물타기하겠다는 속셈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고위원들도 특검 필요성과 이 대표 상대 수사 부당성을 부각하는 목소리를 쏟아내며 가세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은 김 여사 계좌가 활용당했다는 듯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며 “공소시효는 지금도 유효하고 김 여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에게 직을 내려놓고 제대로 수사 받으라는 말을 그대로 돌려드린다”며 “김 여사는 대통령 영부인직을 내려놓고 제대로 특검 받으라”고 촉구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 경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 이뤄진 건 맞지만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당시 위치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에서 던 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 아래에서 철벽 방어를 한 것”이라며 “수사를 2년 내내 한 게 아니라 5개월 한 데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김 여사 주가조작 가담이 가짜 뉴스고 이용당한 것이라면 왜 수사에 입하

지 않나”라며 “김 여사가 직접 입장을 밝히고 그게 아니라면 남편인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결국 특검밖에 없다.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고 공정과 정의, 상식을 바로세워야 한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즉각 특검을 수용하라”고 했다.

또 김 여사 의혹에 대해서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가담으로 볼 수 없다는 건 해괴한 주장”이라며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통장을 빌려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가”라고 비난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대장동 관련 이 대표를 잡겠다고 파고 뚫는데, 이 대표가 돈 한 푼 받은 증거가 나온 적 있나”라며 철저한 대장동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더해 김 여사 의혹 관련 대통령실 입장 발표를 비판하고, 연루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압수수색, 계좌추적, 소환을 해 더 많은 것을 찾아내야 한다”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에 대해 “김 여사가 직접 고소할 사건도 대신 고발해 주더니, 영부인이 되기 전 혐의에 대해서도 대신 입장을 내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 거래도 경제 수석이 대신해줄

판”이라며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면 김 여사 수사를 하지 말라는 시그널이 될 것이다. 대통령실 개입 말고 김 여사 변호사가 입장 발표하라”고 말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대장동 의혹 관련 철저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고 “가장 중요한 건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 대출 의혹 사건”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했다면 대장동 관련자들은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을 것이고, 부산저축은행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특검은 검언유착 실제, 부산저축은행 피해 보상,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필수조건이 됐다”고 주장했다.

임선숙 최고위원은 “이 대표 혐의 입증에 자신이 없는지 새 영장 청구 시나리오를 가둔 것”으로 보인다고 “갈라치기와 억지 요건 만들기”라고 말했다.

그는 “50억 클럽 수사가 뒷전인 것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다”며 “검찰에 협조하면 석방, 안 하면 구속이란 내 멋대로 영장에 국민 우려가 커진다”고 했다.

최이슬 기자

민주 “소상공인·자영업자 ‘에너지 지원책’ 수립 촉구”

‘요금폭탄 지원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 열어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부의 에너지 지원책이 취약계층에만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가스요금·전기요금 폭탄 지원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난방비 폭탄에 민심이 들끓자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해서

는 지원 확대 계획을 짚음 내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으로 한 대책은 전무하다”며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에너지 지원책을 별도로 수립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 “소상공인들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의무휴업제도 무력화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는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상생 제도”라고 언급했다.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재차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규모의 긴급민생프로젝트를 수용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 추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소상공인이 가게에서 쓰는 전기·가스비에 대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도 가게 한 곳당 30만원 이상 꼭 챙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환 기자

전남도의회 김태균 부의장 “설립 3년차 전남관광재단 조직개편으로 역할강화”



전남도의회 김태균 부의장(광양,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열린 제368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전남관광재단 업무보고에서 설립 3년차를 맞은 전남관광재단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김태균 부의장은 “현재 전남관광재단의 조직구성은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관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관광진흥법, 정책팀 신설 등 조직

개편을 통해 전남도의 관광정책을 이끄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남도의 위탁사업에 국한되어 있는 관광재단의 소극적인 업무영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관광안내소 운영,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등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관광분야 사업들을 직접 수행하는 등 보다 더 적극적인 재단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균 부의장은 이어진 관광문화체육관광 업무보고에서 “관광재단에 대한 용역을 시행해 서라도 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전라남도가 신경써야 한다”며 “설립 3년차를 맞은 관광재단이 전남 관광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기구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임 대표이사에는 관광전문가를 임명하는 등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